

능장 검사에 매뉴얼 탓만...중요 발암물질은 측정 안했다

‘금타 화재’ 총체적 난맥 드러낸 광주시

광주시의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응과 관련, 총체적 무능함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이 화재 발생 이후 유독가스와 매캐한 연기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즉각적인 오염도 측정 에 나서지는커녕, ‘매뉴얼이 없다’며 화재 발생 나흘 뒤 ‘완전’ 선언이 내려진 뒤에야 대기 중 중금속 측정에 나선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또 생고무·타이어 등이 대규모로 적재된 공장 화재 시 많이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꼽히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 다이옥신 등은 아예 측정하지 않는 무심경함도 드러났다. 여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분석했지만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정작 4개 항목만 공개하는 무심함까지 보여주면서 재난 대응의 ‘3무’(無) 행정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도 너무나 능장 검사...불 꺼진 뒤에야 검사=광주시는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17일) 나흘 뒤인 지난 20일에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대기 중 중금속 물질(6종)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이후 타이어 등이 불에 타면서 내뿜는 매캐한 검은 연기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소방당국이 ‘완전’ 선언을 한 20일까지 중금속 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화재 당일인 17일 ‘유해화학 대기오염 물질 유출 관련 매시간 측정 결과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재난 안전 문자를 전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광주시는 ‘매뉴얼에 없어서’, ‘측정 장비 운영 기간이 아니라서’라고 했다. 중금속은 수동으로 한 달에 5일간 측정해 5월 전체 평균으로 내는 방식의 측정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측정 기간이 아니라 시기

휘발성유기화합물 59종 분석하고 실제 공개된 것은 벤젠 등 4종 뿐 시민 알권리 보장 강조하고도 입맛 따라 선택적 정보만 제공 전문가 “책임있는 환경 행정 필요”

에 맞춰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일부터 수동으로라도 측정해보자고 해 포집 장비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시스템에 있는 항목만...중요 발암물질 측정은 제외=국내외 산업계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등 생고무·타이어 등 불완전 연소가 많은 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기 중 배출될 우려가 높은 대표적 물질로 PAH, 다이옥신 등이 꼽힌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 PAH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데, 광주시 등 환경 당국은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에서 이들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평소 검사 측정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제외했다는 게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 설명이다.

시민들이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지,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지 꼼꼼하게 항목을 살피고 세심하게 점검하기 보다는 있는 것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환경 행정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만큼 정확하고 책임감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금속 중 카드뮴과 크롬, 그리고 PAH는 발암 위험이 입증된 물질이라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알권리 강조하면서...자기를 입맛대로 공개=



26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이 화재로 불타 콘크리트 골조와 잔해만 남은 채 잿더미가 돼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은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대기 중 VOCs 59종을 분석했다. 정작 시민들에게 공개된 항목과 측정치는 에틸렌옥사이드,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벤젠 등 4종류에 불과하다.

지난 2023년 3월 한국타이어이 화재 당시 문제가 됐던 물질이 벤젠,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에틸렌

옥사이드 등이라 해당 측정치만 공개했다는 게 영산강청 설명이다. 광주시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며 ‘시민 대기오염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들이 취사·선택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의 이같은 인식이 관련 규정 상 사용

금지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비교한 뒤 ‘미미한 수준’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27일 저녁부터 나머지 항목들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화재 석달전 점검서도 다수 소방시설 ‘불량’

금타 최근 3년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 보니

금호타이어가 화재 발생 3개월 전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조사에서도 상당수 불량 소방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가연성 자재가 쌓여있는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초기 화재를 선제적으로 제압할 설비 전반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광주광산소방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금호타이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2023~2025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뤄진 금호타이어 소방 점검 결과, 공장 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유도등 등 상당수 소방안전시설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5

노후시설 가연성 자재 많은데도 초기 화재 대응 설비 결함 드러나 2공장에 간이스프링클러도 없어 경보설비 6개 불량도 지적

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공장 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유도등 점검결과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발생한 2공장에는 국내·외소화전설비는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도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건의 불량 경보 설비도 적발됐다. 발신기 3개의 표시등 파손, 열감지기 2개 누락, 발신기 경종 작동 불량 등이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점검에서도 국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유도등, 방화문과 자동방화 셔터의 상당수 불량 문제가 드러났고 화재가 발생한 2공장에서도 소화설비 불량(2건), 경보설비 불량(11건)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에도 경보설비 불량 문제가 빠지지 않았다. 성형라인에 있는 4번 발신기에는 경종이 설치되지 않았다. 성형인과 가류라인에도 발신기 경종선이 끊어져있거나 표시등 파손, 열감지기 탈착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23년도 점검에서도 비슷한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장의 점검 시 소방시설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공장 내 자동화재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반적인 기능 재점검과 화재 발생 당시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덕수·최상목·이상민 ‘3인방’ 동시 소환

경찰, 계엄 문건 허위 진술 추궁

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3인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각각 내란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전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인지 시점과 계엄 실행계획 등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상황 등이 실제와 달랐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화재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Korea Insurance GA Association